

# 2013년도 대교협 총장 세미나

강이화, 문보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 연구원

2013년 2월 18일 개최된 대교협 동계총장세미나에서는 이영선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대학의 미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기조강연에서는 미래 사회의 트렌드, 미래 대학에 대한 도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 미래 대학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 대학의 당면과제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미래 사회가 정보통신의 혁명, 학령인구의 감소, 세계화의 확대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하면서, 미래 대학은 지식 전파와 같은 부문에서 대학의 독점력이 약화되고 전공교육의 의미가 퇴색하며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 산

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네트워크 사회에 적응하는 인재, 공동체 윤리 의식을 지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재, 국제적 시각을 지닌 인재, 인류공동체적 과제에 관심을 갖는 인재, 변화되는 지식을 감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 인재를 제시하였다. 미래 대학의 바람직한 방향은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제를 마련하며, 대학의 특성에 따른 다양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선진국 대학이 연구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 대학의 당면 과제로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재정 악화, 대학지배구조의 취약성 해결을 지적하였다. 먼저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대학구조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평가지표를 정비하여 지속적인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하며, 대학재정 악화 해결을 위해 대학의 비용구조와 교육비 분담 체제, 정부에 대한 종속성 등의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지배구조의 취약성 해결과 관련하여 이사회, 총장, 교수, 직원, 학생 영역의 역할 분담과, 지배구조를 공유·분점하는 형태로 지배구조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한국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대학별 특성화를 추구하고, 정책당국의 효율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이어진 대교협 고등교육재정대책위원회(이하 재정대책위)는 송기창 대책위 위원(숙명여대 교수)의 발표를 통해 '새 정부에 바라는 고등교육정책 제언- 고등교육재원 GDP 대비 1.1% 확보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대책위는 "대학 진학률이 80% 내외로 대학교육의 성격이 보통교육화된 현실에서국민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국

가가 고등교육 기관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할 책임이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송 교수는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GDP규모는 9위인데 반해 대학투자 규모는 22위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최근 일고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과 함께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OECD 국가의 평균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1.1% 수준으로 할 것"을 새 정부에게 요구했다. 이에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GDP 1.1%인 14조 9,000여억 원의 예산 중 2013년 고등교육예산 7조 5,000억 원 외에 7조 4,000여억 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내국세의 8.37%에 해당한다. 현행 초·중·고교에 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규모다.

그러기 위해 대책위는 고등교육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을 2013년 현 3조 2,000억 원에서 장학교부금을 통해 7조 5,000억 원으로 확충하고, 대학구조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기존의 고등교육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증액하고 대학강사제도 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고등교육법에서 규정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현행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5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 이내'로 조정하고,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비 상한제 적용기준과 등록금 조정위원회 설치 등 운영지침을 논의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운영할 때는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라는 지원 조건을 없애고 현행 7,000억 원인 사업 규모도 1,000억 원 규모로 축소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 고등교육법 제11조에서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정부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3년마다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다음날 개최된 특별위원회 7개 분과(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대학재정대책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사학법대책위원회, 대학평가대책위원회, 국제화대책위원회)에서는 각각 새 정부의 대학자율화 추진 방향과 과제(발표: 충남대 신희권 교수), 새 정부의 대학재정 확충 방안과 과제(발표: 영남대 김병주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 방안(발표: 중앙

대 함영주 교수), 새 정부의 국·공립대 발전 방안과 과제(발표: 경상대 백종국 교수), 새 정부의 사학발전을 위한 사학법 대책과 과제(발표: 협성대 김성기 교수), 새 정부의 대학 평가와 구조조정의 방향 및 과제(발표: 박승철 성균관대 교수), 새 정부의 대학국제화 정책방향과 과제(발표: 동국대 김인재 교수)를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분과별 주요 논의 내용으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에서는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화 정책이 필요하며 시간강사제도 등 현안에 대해 대학의 입장을 정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대학재정대책위원회에서는 고등교육재정문제가 재정, 법, 평가 등 여러 분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분과가 협력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고등교육재정확보를 위해 대내외 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특성화 교육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장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공립대발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국·공립대학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국·공립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면서, 사안에 따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사학법대책위원회에서는 현행 이사장, 총장 등의 구성에 대한 제재가 법적으로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임을 논의하며 사립대학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평의원회 이사 구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학평가대책위원회에서는 대학구조조정 및 평가 지표를 개선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었는데, 지표를 단순화하고 지방대학균형발전 차원의 대학 격차를 반영하는 개선안 등이 논의되었다. 국제화대책위원회에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각 대학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 대학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채널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필자소개

**강이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 연구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문학사와 교육학석사 학위, 독일 괴팅겐 대학교(Georg-August Universitaet Goettingen) 교육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교육, 대학교육과정, 성인학습자, 질적연구 등이다.

**문보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 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여성HRD 연구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고등교육재정, 교육정책, 교육제도 등이다.